



2019학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진행된 5일, 서울 여의도여고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

올해 지원 전략 최종 점검할 9월 모의평가 실시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시 지원 계획을 최종 점검할 9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도로 출제됐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지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 영역도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이다.

수학 나형, 영어 새로운 유형 출제

먼저 국어 영역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다는 평이다. 어렵게 출제됐던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체감 난도가 낮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또 “화법과 작문의 경우 화법, 작문 통합형 문항의 수가 4문항에서 5문항으로 늘었으나 문제 유형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며 “문학의 경우 최근 산문문학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남은 기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학 영역의 경우 고난도 문제는 다소 평이했지만 중상위 난도 문제가 비교적 까다로웠다는 평이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어려웠고, 난도가 높았던 6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쉬웠다는 분석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가형은 문제 유형이 기존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와 같았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충실히 준비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형은 6월과 비교했을 때 고난도 문항이 다소 쉬웠지만 익숙하지 않은 형태여서 당황한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 비율은 지난해 수능이 10.0%, 올해 6월 모의평가는 4.2%였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작년 수능보

다 약간 어렵게 출제됐으며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됐다”면서 “이번 모의평가는 6월에 이어 신유형 문항이 출제됐다. 수능에서 신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이나 논리 추론 문항은 지문의 길이가 약간 짧아졌지만 지문의 소재는 철학, 심리, 교육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중하위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며 지문의 소재, EBS 연계 비율, 문제 유형 등은 6월 모의평가와 동일했다”고 분석했다.

탐구 영역 역시 과목별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시·정시 중

어디에 집중할지 참고 자료로

전문가들은 모의평가 결과를 정시와 수시 중 어디에 집중할지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는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연구소장은 “9월 모의평가는 수시 지원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험이므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점수가 얼마나 오를지 판단해 수시 지원 전략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한 수험생은 내신과 면접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수시를 준비한다면 본인의 성적대에 따라 지망 대학을 추리고 해당 대학에서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반면 정시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수능·모의평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풀이에 집중해야 한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iang@naeil.com

17년 만에 서울 지역 특수학교 설립 본격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온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실에서 김성태 국회의원,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함께 지난 3년간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소통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5일 장애인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주민들 앞에서 무릎 꿇는 영상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된 지 1년 만이다. 이후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합의로 지역주민의 협력하에 신축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손동호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에서 배려와 공감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며, 강서 특수학교 설립 이후에는 장애·비장애, 특수학교·일반학교를 떠나 함께하는 아름다운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예정대로 강서구 옛 공진초 부지에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건립 공사를 진행해 내년 9월 개교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특수학교가 신설되는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대신 기존 공진초 교사를 활용해 주민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서진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될 때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 일부에서는 시교육청이 학교 건립에 반대한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 설립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세워 지역구 의원과 주민에게 허락을 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회는 이날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강서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 학생 부모들은 “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는 결코 기피시설이 아님에도 ‘대가성 합의’를 맺어 기피시설처럼 인식되게 했다”면서 “설립 예정인 서초구 나래학교와 중랑구 특수학교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리석은 거래로 장애 가족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면서 “교육감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

은 국회의원도 비대위도 아닌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 가족들”이라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의 어머니로 서진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교육청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장애 학생의 부모들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교육청이 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특수학교를 짓게 해주면 한방병원 설립에 협조한다고 약속했으니 다른 특수학교 설립 때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조 교육감이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조기취업 가능한 계약학과 육성한다

청년 실업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초기에 취업을 확정하고, 기업에 재직하면서 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성장하는 교육 모델이 도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ERICA), 경일대, 전남대, 목포대 등 5개 대학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을 가르치는 학과다. 학생들은 이론 중심의 대학 교육과 실무 중심의 기업현장 교육을 결합한 3년 6학기제 교육을 받는다. 1학년 때 기본 교육을 받고 계약 기업에 취업한 뒤 2~3학년 때는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학과 공부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학교협동조합 학습·체험 공간으로

정부가 학교 내 협동조합을 학생과 지역주민의 학습·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고 매점 외에 다른 사업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학습·체험 공간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커져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 대상 교사 성비위 10건 중 2건 ‘숨방망이’ 처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추행·성폭행 10건 중 2건은 숨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교사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94건의 교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82건(36.8%)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다.

182건 중 35건(19%)은 징계 수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대상 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교사 10명 중 2명은 감봉·견책·경고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